

수신 : 각 언론사

<b>부산환경회의</b> (대표 : 강호열 010-3180-0181 민은주 010-9301-7888)	<b>보도자료</b>	배포일시 : 2021.4.14.(수) 매수 : 3매 보도일시 : 배포즉시
<b>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b> (회장 : 신광자 010-8535-6040)		담당자 :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010-8244-3382
<b>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b> (대표 :안하원010-2642-2999)		담당자 :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 010-9301-7888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성명발표

일시:2021년4월14일 오후1시

장소:일본영사관 소녀상 앞(부산시 동구 고관로 18)

주관:부산환경회의,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성명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해양방류 결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한민국 정부는 부처  
간 책임 전가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4월 13일 오전, 일본정부가 기여히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  
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간 자국의 국민과 전세계가 우려를 표명하며 해양방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일본은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오만함에 분노를 표한다.

원전 오염수는 수개월 후 동해, 부산 앞바다, 제주도 앞바다 등 대한민국 바다에 도달할 것이며, 태평양 바다 뿐 아니라 순환하는 해류의 특성상 전지구적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국내 수산물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것이며, 어업인 피해, 상인의 피해, 소비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보건안전의 위기, 경제위기로 고통스러운 시기에 일본은 국제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투척하였다.

내로남불 일본은 각성하라!

일본은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는 과거를 잊었는지, 2021년 4월 13일 각료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결정을 하였다! 30년 만에 내로남불의 경솔한 결정을 한 일본정부와 스가총리는 역사 앞에 심판 받을 것이다.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 시민들의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할 권리를 보전하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제소를 한 바 있고, 2018년 2월 패소하였다. WTO는 우리나라의 규제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며,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고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정했다. 이후 일본은 패소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를 풀 것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전세계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므로,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방안을 마련하라!

UN에서는 국제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7개 중 대양·바다·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것에 각국이 목표를 수립하여 약속을 천명하였다. 해양과 해양생태계는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는 바 각국이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반감기를 고려한 장기보관 등 안전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저장 가능 물량은 약 137만톤이고, 2021년 3월 현재 125만톤 가량이 찬 상태다. 방사능은 내부피폭이 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고 안심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등 특수 정화장치로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ALPS를 통해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다. 일본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으로 경제적 효율만 따져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철회하고, 다음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일본은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을 취소하라!

하나, 일본은 다음세대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 시민을 위해 안전한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부처간 책임 전가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04.14.

부산환경회의(42개단체),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8개단체),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